

[테마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 - 유럽 위기 편

발행 | 2012년 11월 16일

지은이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펴낸이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주소 | 서울 마포구 상수동 6-1번지 302호

전화 | (02) 322-4692

팩스 | (02) 322-4693

인터넷 사이트 | <http://saesayon.org>

이메일 | edu@saesayon.org

책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테마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
- 유럽 위기 편 -

[여는 글]

여름을 지나면서 조금 진정되는 듯했던 유럽이 다시 시끄럽다. 11월 14일 유럽노조총연맹(ETUC)의 주도 하에 유럽 23개국에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다. 특히 그동안 재정위기와 긴축재정으로 고통받아온 그리스, 스페인 등의 남유럽 국가 시민들의 반응이 격렬하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 유럽연합(EU)이 탄생했고, 1999년 단일화폐인 유로화가 출범했다. 하지만 유로존 국가들 사이의 커다란 경제력 차이가 존재했고, 이는 무역수지의 과도한 불균형과 금융자본의 쏠림을 가져왔다. 탄탄한 경제력을 가진 독일은 유로존 내의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높은 무역흑자를 올렸고, 그렇게 쌓인 돈은 독일은행을 통해서 그리스나 스페인으로 흘러들어가 거품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자본 흐름은 중단되었고 거품은 급속히 꺼졌다.

거품과 함께 붕괴되는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나 스페인의 정부가 나섰다. 결국 재정위기로 이어지며, 구제금융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트로이카로 불린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은 구제금융과 함께 해당 국가에 임금삭감과 공무원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긴축재정안을 요구했다. 물론 이에 대해 해당 국가 국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트로이카가 투자자인 독일이나 프랑스 은행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만 노력한다는 비판, 긴축재정을 강요하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독일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 올해 2월 그리스가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이네, 못 받아들이네 하던 상황, 4월을 넘어서면서 이번에는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네, 안하네 하던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

세계의 석학들은 유로존 위기의 근본은 정치적, 경제적 통합 없이 진행된 통화통합에 있다고 지적한다. 단일통화를 쓸 경우 앞서 지적한 것처럼 경제력 차이에 의한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치정책은 부재한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저마다의 입장을 주장하는 개별 국가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은 ‘연합’이 되지 못했다. 장 피사니 페리는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과 미합중국과의 차이라고 지적하며, 연합체로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나눠지지 못한 유럽연합을 비판한다. 대니 로

드릭은 결국 세계화와 민주주의, 주권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유럽연합 역시 개별국가의 주권을 양보하고 유럽연합을 제대로 된 연합체로 만들던지 아니면 주권을 지키는 경제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국가로 돌아가던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로랑스 투비아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유럽연합이 유럽 차원의 투자를 주도해나가면 경기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함께 시민들의 삶 또한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교육, 지식,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개선에 필요한 투자에 나서라는 것이다. 이는 아시아에도 적용되는 해법이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저마다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쌓아놓고 있다. 이를 동아시아 공동체 차원에서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서 운용하면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세계 경제 침체로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금을 동아시아 내에 투자하여 역내 수출과 소비를 늘림으로써 경기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세계화 시대, 금융위기나 재정위기와 같은 위기는 세계화의 속도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를 제어하는 수단과 주체, 이로 인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이들은 여전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 국경을 넘는 협조가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지만, 결국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각국의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세계화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의 협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수연

전체 목차

- ◆ 여는 글 ----- 4
- ◆ 그리스 사태, ECB가 강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 5
유럽중앙은행 바로 잡기 / 조셉 스티글리츠
- ◆ 그리스, 세계 시장과 국민 정치의 갈등 ----- 8
유럽 위기로 보는 세계화의 미래 / 케말 데르비스
- ◆ 그리스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12
누가 그리스를 잃어버렸는가? / 장 피사니 페리
- ◆ 6월 안에 다가올 그리스 유로 탈퇴, 어떻게 막을까 ----- 15
목시록은 확실히 온다 / 폴 크루그만
- ◆ 유럽, 녹색 성장으로 탈출하라 ----- 20
녹색 탈출을 준비하라 / 로랑스 투비아나
- ◆ 유럽이 미국처럼 합중국이 될 수 없는 이유 ----- 24
유럽, 연방이 될 것인가, 붕괴할 것인가? / 장 피사니 페리
- ◆ 세계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의 트릴레마 ----- 28
주권에 관한 진실 / 대니 로드릭

그리스 사태, ECB가 강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2012.02.09 | 이수연_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유럽중앙은행 바로 잡기(Capturing the ECB)”라는 제목의 글을 요약 소개한다. 글을 쓴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콜롬비아대학교의 교수이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다. 저서로 '끝나지 않은 추락(Freefall: Free Markets and the Sinking of the Global Economy)' 등이 있다.

스티글리츠는 그리스의 국가 부채 해결에 있어서 유럽중앙은행(ECB)이 보이고 있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ECB는 투자자 혹은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도록 하는 채무 불이행에 반대하며, 대신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투자손실 부담을 짊어져주기를 바라고 있다. 스티글리츠는 이러한 입장을 두고 특이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독일 정부는 채권자들이 최소한 50% 정도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투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스티글리츠 역시 이와 비슷하다. ECB가 더 많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은행의 투기를 규제하고, 은행에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강제적 채무조정, 민간 투자자에 막대한 손실을 물리는 방식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은행 시스템을 잘 통제하고, 국채를 보유한 은행의 보험 가입을 통해 안정성을 담보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더 강제적이고 통제된 방식이 필요하며, ECB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럽중앙은행 바로 잡기 (Capturing the ECB)

2012.02.06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그리스 국가 부채에 관한 논쟁은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견해의 충돌과 근시안적 경제정책, 이익집단의 폐해를 가장 잘 보여준다. 독일은 채권소유자들이 적어도 50% 손실처리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부채 조정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부채위기를 생각해보자. 당시에는 상황을 부드럽게 해결하고자 했던 정부와 규제당국의 권유 혹은 강압에 의해, 주로 대형 은행이었던 채권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짜낼 수 있었다. 하지만 부채의 증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채권자는 수도 없이 많아졌으며, 그 중에는 정부와 규제당국을 좌지우지할 만한 헤지펀드도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금융시장의 "혁신"은 채권자들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 역주)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들은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들은 보험금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건 채무 불이행의 "신용사태"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ECB는 채무 불이행 상태를 막고자 "자발적인" 채무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ECB의 입장은 특이하다. ECB는 채권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않고 50%의 손실을 감내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ECB의 이런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사실 (채권 투자를 했던 - 역주) 은행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그 중 일부는 투기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둘째, ECB는 금융시스템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즉, 채무 불이행의 충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투자자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셋째, ECB가 보험에 가입한 은행을 위해 자금을 준비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설명 중 어떤 것도 ECB가 강제적인(비자발적인) 채무 조정을 반대하는

적절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ECB는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 규제당국은 은행이 투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은행은 보험에 들고, 보험금 지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채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게다가 강제적인 채무조정이 자발적 채무조정보다 충격이 크다는 근거가 없다. ECB는 자발성을 강조함으로써 채무조정이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채무조정이 필수적이다.

결정적으로 ECB의 태도에서 이상한 점은 민주적 운영방식에 관한 것이다. 신용사태가 발생할 것인지 아닌지는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ECB가 비공개 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여 채무 조정방식을 어떻게 할 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강제적인 채무조정이 금융위기의 전염 효과를 가져와 이탈리아, 스페인, 심지어 프랑스와 같은 거대 유로 지역 경제들마저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는 일면 공익을 고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역시 논점을 피해가고 있다. 왜 강제적 채무조정이 자발적 채무조정보다 더 심각한 전염 효과를 가져 온다고 생각하는가? 은행 시스템을 잘 통제하고, 국채를 보유한 은행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 강제적 채무조정이 금융시장을 덜 혼란시킬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리스가 강제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난다면, 다른 국가도 그런 식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국가의 금융시장은 이미 문을 닫았다. 그래서 충격의 연쇄반응은 제한적이다.

ECB는 예기치 않은 놀라움을 가져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관이 특수한 이익이 사로잡혀 행동하던 모습을 이미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다. 2008년 이전에 그러했다. 불행하게도 유럽과 전 세계 경제에는 그때부터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 세계 시장과 국민 정치의 갈등

2012.02.15 | 이수연_세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케말 데르비스(Kemal Dervis)의 "유럽 위기로 보는 세계화의 미래(The Global Future of Europe's Crisis)"와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의 "국민국가의 부활(The Nation-State Reborn)"을 요약 소개한다.

케말 데르비스는 전 터키 재무장관이자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 세계은행 부총재로 현재는 브루킹스 연구소 부소장이다. 대니 로드릭은 하버드대학교의 국제정치경제 교수이며, 저서로는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가 있다.

오늘(15일)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의 최종 승인을 내리기로 했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취소됐다. 최근 그리스 의회를 통과한 긴축안을 이행하겠다는 그리스 각 정당의 서면확약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근본적으로는 그리스가 긴축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 긴축안은 임금삭감, 공무원 감축 등 그리스 국민들의 희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독일과 프랑스 채권은행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당연히 그리스 국민들의 저항은 거세다. 때문에 지금은 사퇴한 그리스 전 총리 파판두레우는 긴축안을 포함한 구제금융안과 유로존 잔류 여부를 두고 국민투표를 부칠 것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금융자본의 압력에 의해 국민투표는 철회되었고, 결국 사퇴했다. 현재 그리스 총리는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사람으로 불리는 파파데모스다.

그리스의 이같은 상황을 두고 데르비스는 국민국가의 민주적 정치와 세계화가 대립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향후 이 둘 사이의 대립과 긴장이 중요

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보았다.

로드릭 역시 한 때 세계화로 인해 국민국가는 쓸모가 없다는 환상이 돌았지만, 금융위기로 인해 국민국가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았다. 위기 이후 구제금융을 실시하고, 경기부양 재정정책을 피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일들은 모두 국민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사실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대립이라고 불리기에는 정확하지 않다. 1%만을 위한 세계화, 금융자본만을 위한 세계화와 99%를 위한 민주적 정치의 대립이라고 불려야 정확하지 않을까?

유럽 위기로 보는 세계화의 미래 (The Global Future of Europe's Crisis)

2012.02.14.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케말 데르비스(Kemal Dervis)

유로존 위기는 2012년에도 계속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리스 국가 부채에 대한 그리스와 채권은행 사이의 협상은 결국 결론이 나겠지만 채권은행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의문이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의 국채 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IMF의 요구는 타당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경우 부채에 허덕이는 다른 유로존 국가들도 똑같이 부채 탕감을 요구하고 나설 수 있다. IMF, 유럽안정화기금(ESF), 유럽안정화기구(ESM)가 약속한 지원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

물론 몇 가지 긍정적인 조치도 있었다. ECB는 3년 동안 1%의 이자로 유럽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은행 위기를 막았다. 하지만 이 조치가 채무 국가들이 지고 있는 장기 대출을 줄이지는 못했다. S&P는 1월 중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그

외 7개 유로존 국가의 신용등급을 AAA로 낮췄다.

유로존이 직면한 위기의 핵심은 경제 통합 없이 일어난 통화 통합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 유럽 위기는 통화 통합이라는 특수한 문제를 넘어서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학자들은 개별 국민국가의 민주적 정치와 세계화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을 지적하고 있다. 무역, 통신, 금융이 서로 연결되면서 금융시장의 요동에 더 취약해졌으며, 각 국민경제 사이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졌다. 그 결과 모든 곳에서 개별 국민국가의 정치인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제약이 따르기 시작했다.

이런 긴장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 그리스 전 총리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가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여부를 두고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이다. 국민투표는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시장은 매 시간, 매 분마다 변하지만 국가의 토론은 몇 주씩 걸린다는 사실이다. 결국 금융시장과 그들을 두려워한 유럽 지도자들의 압력에 의해 파판드레우의 제안이 철회되기까지 24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전 세계에 걸쳐 국민소득에 비해 금융자산은 매우 커졌다. 금융시장은 대부분의 국가를 제압할 수 있다. 부채에 많이 의존한 국가일수록 취약하다. 만약 금융시장과 중국중앙은행이 갑자기 미 재무부 채권의 매입을 거절한다면 미국경제는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채권국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의 수출품을 수입하지 않는다면 중국 역시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위협들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더 강력한 세계 경제 정치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시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싶고, 정치에 대해 토론하고 싶고, 제안된 협력 조치들에 대해 동의절차를 거치기를 원한다. 초국가적인 형태의 정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시장을 국가 내부에 재배치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초국가적 협력을 추구해온 유럽연합에서조차 경제문제에 대한 정치적 협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지금 위기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그럴 일을 없을 것이며,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세계화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부분적으로 역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유럽이 고심하고 있는

국경을 넘어서는 정치는 전 세계가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전반기에 펼쳐질 핵심적인 정치적 토론은 세계 시장과 개별 국민국가의 정치 사이의 긴장 해소 방법이 될 것이며, 유럽위기는 이를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012.02.29 | 이수연_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장 피사니 페리(Jean Pisani-Ferry)의 "누가 그리스를 잃어버렸는가?(Who Lost Greece?)"를 요약 소개한다. 장 피사니 페리는 파리듀퐁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며, 국제경제싱크탱크 브뤼겔(Bruegel)의 대표이다.

그리스 의회가 28일 밤늦게 2차 구제금융을 얻기 위해 약 32억 유로(43억 달러) 규모의 추가 긴축 조치를 가결했다. 이는 유로존과 IMF로부터 1300억 유로의 긴급자금을 구조 받고, 국채 상각을 통해 1070억 유로의 부채 탕감을 받기 위한 조건이었다. 긴축 조치에는 전 공무원의 임금 삭감과 1300유로 이상의 연금 삭감 등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그리스는 2차 구제금융에 한 발 더 다가섰고 돌아오는 국제 만기일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 피사니 페리(Jean Pisani-Ferry)는 그리스 사태의 책임은 그리스 자체에도 있지만 유럽연합에도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스가 부패와 부채로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못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유럽연합의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초기 대책이 너무 늦었고, 일관성 있는 방향이 부족했으며, 당장 예산 조정을 통한 부채 축소에 급급해서 경제 회복과 성장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음을 꼬집었다. 또한 인상적인 것은 정치적 연합체인 EU가 최저임금 삭감 등을 주장하면서 불평등을 조장한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는 점이다.

누가 그리스를 잃어버렸는가? (Who Lost Greece?)

2012.02.28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장 피사니 페리(Jean Pisani-Ferry)

유럽 사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스의 국채 만기일인 3월 20일까지 그리스와 채권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빚을 갚아야 할 날을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스가 약속한 긴축안을 실행하지 않고 유로존을 탈퇴하거나 혹은 채무불이행 선언을 해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덜란드, 핀란드, 독일의 몇몇 정치적 지도자들은 그리스가 왜 유로 존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 매우 의문스러워했다. 아테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마치 1920년대 독일인들이 전쟁 보상금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던 것처럼 말이다.

“누가 중국을 잃어버렸는가?” 1949년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를 거둔 후 1950년대 미국의 전략가가 던졌던 질문이다. 조만간 유럽 역시 그리스를 두고 스스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주범은 물론 그리스 자신이다. 그리스 정치인들의 무기력한 태도, 정부를 망친 이권 정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지수 순위 세계 80위, 이뿐 아니라 그리스는 2011년 9월 그 해에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75개의 세금 중 31개만을 집행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나머지 유럽의 책임을 용서해버리는 것은 너무 안이하다. 유럽 관료들의 첫 번째 잘못은 그리스가 2013년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 비현실적인 구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몇 달을 끌어온 것이다. 그리스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몇 년, 아마도 십 년 째는 걸릴 것이 명백하다.

유럽의 두 번째 잘못은 대외 지급능력 위기에 대한 일관성 없는 대응이다. 두 가지 전략이 가능했다. 그리스의 국가부채를 초기에 감축시켜서 지급능력을 재빨리 회복

시키거나 모든 유로존 국가의 집단적 평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리스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나눠지는 것이다. 둘 중 하나의 전략을 택해서 일관성 있게 진행시켰어야 하는데, 독일과 프랑스는 두 가지를 혼합하는데 합의했다. 이것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세 번째 잘못은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잘못 선택한 것이다. 위기의 시작부터 IMF는 두 가지 문제를 진단했다. 바로 국가부채의 취약성과 심각한 경쟁력 상실이다. 불행하게도 정치가들은 전자에 주목했다. 그리고 태평스럽게도 구조적 개혁이 후자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스 정부는 빈약한 정치적 자본의 대부분을 경쟁력 있는 경제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조정에 투자했다.

현재 구제 프로그램은 선결 문제의 순서를 뒤집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예산 조정을 통한 국가 재정 강화보다 더 앞서 그리스 경제의 경쟁력 회복과 성장을 놓고 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왜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는지 의문이다.

네 번째, 성장 대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하나도 없다. 예산 조정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경기침체를 초래한다. 그리스는 원칙적으로 유럽연합의 예산에서 지역개발원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충분히 이용되지 못했는데, 지역공동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유럽의 마지막 실수는 부채를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기술관료기구인 IMF가 거시경제의 범주를 넘어서는 제안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EU는 정치적 결합체이며, 사회적 정의 실현을 근본 목표의 하나로 추구하고 있다. 때문에 EU는 최저임금을 깎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소득세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상위 10%의 고소득자들이 벌이는 세금 회피를 부차적인 문제를 둔 채로 말이다.

그리스의 긴축을 강요했다는 점을 두고 유럽을 비판할 수는 없다. 이는 막대한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또한 심각한 불균형 상태의 국가는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유럽이 사태 초기에 보여준 신속하지 못한 대책, 나쁜 대책, 불균형적인 대책, 불공정한 대책은 비난의 대상이다. 누가 그리스를 잃어버렸냐는 질문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져야할 일이다.

6월 안에 다가올 그리스 유로 탈퇴, 어떻게 막을까

2012.05.20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saesayon.org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도 그리스와 유로의 붕괴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냈다. 지금 유로의 붕괴 전망 여부는 연간 단위의 시간대가 아니라 월간 간격으로 눈앞에 닥친 문제라면서 심지어 6월 안에 그리스의 유로 탈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5월 13일자 블로그에서 유로 붕괴의 4단계 시나리오를 목시록처럼 던지기도 했다.

<폴 크루그먼의 유로 붕괴 시나리오>

1. 그리스가 유로를 탈퇴한다. 6월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very possibly next month).
2. 스페인과 이탈리아 은행에서 대규모 예금 인출이 일어나고, 예금자들은 자금을 독일로 옮기려고 할 것이다.
3. 아마도 예금의 국외 유출이나 현금인출을 금지하는 사실상의 통제도 가능하다. 대체 방안으로 또는 동시에 유럽중앙은행이 은행 붕괴를 막기 위해 막대한 신용공여를 해준다.
4. 독일은 선택을 해야 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고, 과감한 전략수정을 하는 방안이 있다. 특히 스페인의 조달 금리를 낮추기 위한 부채 지급보증과 동시에 부채의 상대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목표(현재 2%에서 3% 이상으로)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로 존은 붕괴한다(End of the euro).

앞서 소개했던 루비니(Nouriel Roubini)는 그리스의 유로 존 탈퇴가 그리스와 유로 존 모두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루비니 표현을 빌면 ‘양쪽 모두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이별’)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크루그먼은 그리스의 유로 존 탈퇴가 곧바로 스페인 은행으로 번지면서 결국 유로 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루비니와 크루그먼은 모두 유럽의 긴축정책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진단하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또한 크루그먼도 그리스에 부과된 긴축 조치가 경기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27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행한 강연을 통해 그리스의 유로 존 탈퇴는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낳겠지만 다른 대안이 바닥나고 있다고 그리스의 유로 존 탈퇴의 현실을 일찌감치 인정했다.

더 나아가 크루그먼은 유럽중앙은행이 연 2%대의 물가안정 목표에 너무 집착하여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나머지, 적극적인 완화적 통화정책과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더 공격적인 금융지원을 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허용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 우려에 얽매인 독일이 유럽중앙은행을 압박하면서 지금의 상황 악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독일의 정책 전환이 결정적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의 요지를 간결하게 보여준 것이 지난 5월 17일자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폴 크루그먼의 칼럼 ‘묵시록은 확실히 곧 온다.(Apocalypse Fairly Soon)’이다. 루비니 글과 함께 대조하면서 읽어본다면 임박한 그리스 유로 존 탈퇴와 유럽 위기를 빠르고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묵시록은 확실히 곧 온다. (Apocalypse Fairly Soon)

2012.05.17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정치적 동맹 없는 통화동맹이라는 결합을 가진 거대한 실험이 어떻게 균열되어갈 것인지를 보는 것이 갑자기 쉬워졌다. 우리는 장기적 전망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은 연간 단위가 아니라 월간 단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이었고 유로는 여전히 안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유럽의 지도자들, 특히 독일과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몇 년 동안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훈계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처해야 하고 임시방편의 대책을 그만두고 기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과정은 이렇다. 유로체제가 탄생했을 때, 유럽에는 거대한 낙관주의적 물결이 지배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다. 돈은 스페인과 다른 나라들로 쏟아져 들어갔고 그것들은 안전한 투자처럼 보였다. 이와 같은 자본의 홍수는 주택거품과 거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메우는데 충당되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자본의 홍수는 말라버리고, 그로 인해 이전에 거품이 일어났던 바로 그들 국가들에서 심각한 침체가 왔다.

바로 그 시점에서, 유럽 정치동맹의 부재가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왔다. 플로리다와 스페인 모두에서 주택거품은 있었다. 그러나 플로리다 주택 거품이 터졌을 때는 퇴직자들이 여전히 워싱턴(중앙정부)으로부터 사회안전망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스페인은 이에 비견할 만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거품이 터지자 재정위기로 이어진 것이었다.

유럽의 해법은 긴축(austerity)이었다. 채권시장을 다시 안심시키기 위해 잔인한 지출삭감을 단행했다. 그러나 지출삭감은 남유럽 경제의 경기침체를 더 심화시켰고 그럴수록 투자자의 확신은 약화되고 정치적 불안정성은 증대되었다.

그리고 지금 진실의 순간이 왔다.

당장은 그리스가 초점이다. 실업률이 22%가 넘고, 청년 실업률은 50%가 넘도록 만든 긴축정책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긴축정책을 시행한 정당들에게 등을 돌렸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급격한 태도변화의 결과는 극단주의 세력을 부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6월 17일 다음 재총선에서 (지금까지 긴축을 지지해온- 역주) 현재의 지배

연합이 다수의 자리를 연명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기본적으로 굳어지고 있다. 그리스는 이미 독일과 유럽중앙은행(ECB)이 요구하는 정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 그리스는 약한뱅크런(bank-jog)을 경험하고 있는 중인데, 점점 더 많은 예금자들이 그리스 유로 존 탈퇴를 예상하면서 은행에서 현금 인출을 하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은 현재 그리스가 필요한 유로를 대출해 줌으로써 그리스 은행에 사실상 자금공급을 해오고 있는데, 만약 유럽 중앙은행이 자금 공급을 중단하면 그리스는 유로화 포기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자국통화(드라크마)를 다시 발행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이처럼 유로에서 원래 통화로 역전되는 현상은 이번에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은행으로 옮겨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유럽중앙은행은 자금공급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고, 중단한다면 유로는 기본적으로 붕괴될 것이다.

여전히 금융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긴축과 침체로부터 벗어날 몇 가지 합리적 전망이 가능하도록 할 경제 여건이 이탈리아와 특히 스페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여건을 제공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유럽중앙은행이 물가안정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유럽에서 3~4%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수용하고 고무하는 것이다.(독일은 그 이상을 수용해야 한다.)

유럽중앙은행과 독일은 이런 아이디어를 싫어한다. 그러나 이 방법만이 유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하게 타당한 방법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유럽 지도자들은 위기를 맞아 시간을 벌기위한 어중간한 조치로 대응해왔는데, 그들은 아직 그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의 시간적 여유는 없어지고 있다.

유럽이 마침내는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자. 그러나 단지 유로 붕괴가 전 세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 때문만은 아니다. 유럽의 정책적 실패가 불러올 엄청난 비용이 아마도 정치적인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유로의 실패는 끔찍한 역사를 가진 유럽 대륙에 평화와 번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더 광범한 유럽 프로젝트의 거대한 실패로 간주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긴축 실패가 진행되는 그리스에서도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리스에서 정치적 주류세력이 불신당하고 극단주의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유럽의 성공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여전히 성공여부는 유럽인들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 임무를 해낼 수 있는지를 보려고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유럽, 녹색 성장으로 탈출하라

2012.06.01 | 이수연_세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유로존 위기를 경제 구조의 개혁과 함께 에너지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라는 글을 소개한다. 글을 쓴 로랑스 투비아나(Laurence Tubiana)는 지속개발국제관계연구소(IDDRI)의 소장이며 엠마뉴엘 게링(Emmanuel Guerin)은 같은 연구소의 에너지기후분야 책임자이다.

이들 역시 유럽 위기의 문제는 불완전한 통합, 즉 통화는 단일화되었지만 재정만 단일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정책의 연대이며, 그 방안의 하나로 유럽 전체 차원에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반시설 건설이나 지식 및 교육 등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생산적인 부문의 하나로 녹색 분야, 다시 말해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경우 석유집중도(GDP 대비 석유소비량)가 60%로 유럽 전체 평균보다 높다. 이러한 에너지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다면, 위기 국가들의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며 전체 유럽 차원에서도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대비하는 장기적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우선 유럽재정안정기구나 유럽연합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100억 유로 정도를 기부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마도 독일과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기부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투자은행이 “녹색 채권”을 발행해서 민간의 자금도 흡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투자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럽은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면서도 긴축정책으로 일관했다. 이는 모순된 대응이었다. 이제 누가, 어디에 투자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경기부양을 가져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녹색 탈출을 준비하라 (Preparing for the Green Exit)

2012.05.30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로랑스 투비아나(Laurence Tubiana)

엠마뉴엘 게링(Emmanuel Guerin)

유럽 통합은 여러 국가의 단합하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혼란 대신 공동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부채 위기는 유로존이 불충분한 통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근본적인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에 더해진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며,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유럽만이 가진 문제이다. 톨스토이의 말을 빌리자면, 유럽 가족은 저마다 제 나름대로 불행하다. (역주 -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의 첫문장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 나름대로 불행하다."를 인용한 것이다.)

유럽 통합의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던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은 17개의 분화된 경제를 하나의 통화로 빠르게 단일화 시켰다. 하지만 긴축재정을 강화하거나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해 줄 기관을 설립하는 등의 재정연대는 수반되지 못했다. 이는 주변국 경제로 거대한 자본 유입과 정확한 경제상태를 숨겨진 채 가속화된 지속 불가능한 대출을 가져왔으며 이는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이다. 그리고 경쟁력 상실을 가져왔다.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유럽 단일통화라는 불안한 계획은 무너졌다.

위기에 처한 국가들은 통화 가치 절하를 통해 부채 부담을 줄이고, 대외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지만 통화 단일화로 인해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 유로존 국가들은 통화 주권을 포기했지만, 재정과 경제 정책을 공유하여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구조는 만들어지지 못했다. 유럽의 통합은 불완전했다.

기로에 놓인 단일 통화의 운명 앞에서 더 큰 규모의 재정적, 경제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이는 조약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근본적 변화 이전에 지금 문제가 터진 곳에서의 재정적, 경제적 조정을 진행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긴축과 구조적 개혁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대책은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위험을 가져온다.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이 극단주의적 정당을 선택하는 좋은 이유가 되고 있다. 실제 5년째 경기 침체 상태이며 실업률이 20%에 육박했던 그리스에서는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쪽 끝에 있는 극단주의 정당이 최근 선거에서 실질적 승리를 거두었다. 마찬가지로 지난 달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도 우파와 좌파의 극단주의 정당이 30% 이상의 득표율을 얻었다.

유럽이 지속가능한 공동의 번영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유로존 내부의 성장과 경쟁력 회복에 기반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 최근 독일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는 등 좋은 조짐도 보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비에 기반한 회복이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문제를 가진 국가들은 구조적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물론 이는 하룻밤 사이에 가능한 일도 아니며,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재조정과 사회적 결과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 전체 차원에서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녹색 분야는 그 규모와 장기적 성장 가능성 덕분에 향후 유럽의 중요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특히 실제로 자원 가격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의 GDP 대비 석유집중도는 60%에 달해 유럽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다. 녹색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유럽의 장기 생산성에 기여하며, 생산적인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서 위기국 내부에서 구조적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유럽투자은행(EIB)의 대규모 재자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해야만 한다. 위기 동안 EIB는 대규모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대출을 줄이고 있다. 민간 은행이 그 틈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투자를 위한 새로운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유럽재정안정기구(EFSM)으로부터 받은 120억 유로를 사용하거나 유럽연합 예산에서 100억 유로를 재배당 받는 것과 함께 유럽연합의 국가들로부터 100억 유로(130억 달러) 정도를 기부받아야 한다.

더불어 EIB가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 채권”이라 불리는 사채를 발행하여 민간의 자금을 모아야 한다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제안 역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럽 내에서 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그리 많지 않아서 초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때문에 유로존 국가들은 EIB를 통해서 “녹색 채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녹색 분야의 재생에너지와 같은 자산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채권이다. 이 분야에서 만들어질 다양한 상품과 은행의 경험이 결합하면 실물 경제 속으로 자금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다.

지금까지 부채 위기에 대한 유럽의 대응은 긴축과 부양이라는 모순된 정책의 혼합이었다. 기반시설이나 지식과 같은 곳에 들어가는 생산적인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성장과 고용을 촉진시키며, 장기적 번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건이다.

경제 상황이 좋은 국가들은 현재 0%에 가까운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바로 지금이 장기적으로 주변국의 생산적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적기이다. 이는 또한 유럽이 위기에서 나와 지속적이고 번영의 미래의 나갈 수 있도록 구조적 개혁을 촉진하는 길이기도 하다.

지금의 위기는 유럽의 위기이다. 따라서 유럽 전체가 문제 해결의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회복하고, 내일의 도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유럽은 함께 준비해야 한다.

유럽이 미국처럼 합중국이 될 수 없는 이유

2012.09.06 | 이수연_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유럽이 잠잠하다. 두 달 전만 해도 세계경제를 금방이라도 위기로 몰아낼 것처럼 시끄러웠는데 말이다. 정치가와 관료들이 여름휴가를 갔기 때문이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도 들린다.

프랑스 경제학자 장 피사니 페리(Jean Pisani-Ferry)는 유럽 정치가들이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위기를 수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과연 유럽연합의 통합이 계속 진전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연방국가인 미국의 통합과 유럽의 통합을 비교하고 있다. 단일시장과 단일통화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통합은 유사하다. 하지만 유럽이 미국과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연합 차원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연합 차원의 공공지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원함에 있어서 조건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조건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게 된다. 또한 사실상 채무국에 대한 지원금이 연합정부 차원의 자금이 아니라 개별 국가들이 각출한 자금의 합이다 보니 채권국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이유로 인해 유럽의 통합정치가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나마 해결책이 있다면 유럽연합의 기구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유럽연합 기구에 각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서 유럽 전체 차원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기에 대한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동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점점 희박해지는 가운데 더 이상의 통합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 피사니 페리는 브뤼셀에 위치한 경제정책 싱크탱크 브뤼겔 연구소의 대표이며, 파리 도핀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유럽연합의 행정부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자문 위원이었으며, 프랑스의 국제 경제 연구 기관인 CEP II의 대표이기도 했다.

유럽, 연방이 될 것인가, 붕괴할 것인가? (Federalism or Bust of Europe?)

2012.08.31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장 피사니 페리(Jean Pisani-Ferry)

유럽 채권시장의 8월은 위기감을 넘어 침묵의 상태였다. 휴가를 떠난 유럽의 정치가들은 지난 몇 달 간의 고민의 시간에서 물러서서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유럽은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이 될 수 있을까?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미국의 역사에서 나타난 연방제는 연방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단일통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생산, 노동, 자본 시장이 대부분 통합되었고, 연방 차원의 예산 편성은 개별 주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혼란을 상쇄했으며, 은행 부문에서의 문제와 같이 기타 주요 위기의 처리에 있어서 연방 정부가 책임을 졌다. 주 정부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지만, 거시경제 안정화에 있어서 실질적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유럽 연합에게 하나의 모형이 되어 준다. 특히 단일화된 시장과 단일통화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유럽은 미국의 모형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무엇보다 먼저 유럽은 연방 차원의 예산이 자리 잡지 못했다. 1970년대 유럽 공공지출을 유럽 GDP의 5~10%에 달하도록 높이려고 했지만 이 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오늘날 유럽의 예산은 GDP의 1%에도 미치지 못해 30년 전보다 늘어나지 않았다.

20세기를 거치면서 유럽 연합의 공공지출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고, 유럽이 통합을 시작했을 때 공공지출은 이미 국가 수준으로 높아졌다. 연방 지출은 매우 중요한데, 국가별 수준에서 유럽 전체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했다. 당연히 이러한 변화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최근에 유로존은 회원 국가 사이의 상호 보험 제도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2010년부터 유로존 사이의 원조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고 사이프러스로 확장되었다. 스페인도 조만간 은행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함께 원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들끼리 서로 돕는 특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연대는 공짜가 아니다. 수혜자는 예산의 책임이 있는 운영을 약속하는 재정 조약을 따라야 하며, 준자동적 제재(이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개별 국가에 제재를 가하기 전에 회원국들의 찬반을 묻는 것이다. 인구와 영향력을 고려한 가중 다수결을 통해 제재 여부에 대해 찬성의 결과가 나오거나 또는 분명한 반대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역자 주)도 뒤따른다. 또한 원조의 수혜자들은 제안된 정책을 시행하고, 정치에 있어서도 외부의 감시를 받아들이도록 요구받는다. 다시 말해 연대의 대가로 주권의 제한이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유럽연합의 회원국 정부와 의회는 여전히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원조 자금이 연방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들이 제공한 자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확실히 채권국은 이웃국가의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더 많은 힘을 요구한다. 그 결과 통화는 단일화되었지만 유럽의 상태는 미국과 다르다. 단일통화가 오히려 유럽의 각 국가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미국에서 연방 정부는 공동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패로서 행동하며 각 주 정부가 곤

경에 처했을 때 자동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그렇다고 파산한 주 정부를 구제하거나 주 정부의 자치권을 가져오는 수준까지 가지는 않는다. 반대로 유럽에서는 전체를 보호하는 방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곤경에 처한 회원국을 위한 자동적인 지원도 거의 없다. 다만 상황이 더 나은 국가가 조건이 따르는 지원을 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미국은 힘의 집중과 경쟁하지만 유럽은 서로 각각 경쟁한다.

이같은 국가 간 경쟁은 유럽의 통합 정치를 어렵게 만든다. 모든 연방은 중앙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긴장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웃국가로부터 감시당하고 지시받는 것은 중앙으로부터의 감시와 지시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불쾌하고 두려운 일이다.

현재 유럽의 국가가 겪는 문제의 중요한 이유는 유럽연합 기구의 취약함이다. 유럽연합의 기구는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유럽인들 전체가 책임을 지는 기구여야 한다. 공동의 유럽은 단지 국가 단위의 유권자에 국한된 정부와 의회에 의해 국가적 이익을 계산하는 식으로는 탄생할 수 없다.

유럽이 자신만의 모델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표준적인 연방 모델 근처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 가지 해법이라면 유럽 전체의 토론을 소집하고, 각 국가의 대표를 파견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유럽 의회가 책임지는 유럽연합의 기구가 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환시키는 것이다.

어떤 길을 가든지 앞으로 유럽은 공동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아니면 통합의 길을 유지할 만큼 공동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세계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의 트릴레마

2012.10.10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saesayon.org

도대체 유럽 위기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유력 기관들의 올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전망을 모조리 엉터리로 만들어놓았을 뿐 아니라, 향후 세계경제 전망을 대단히 어둡게 만들고 있는 유럽위기에 대해 아직 누구도 해결을 실마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5000억 유로 규모의 유로 안정화기구(ESM)도 공식 출범했고, 유럽중앙은행이 단서를 달긴 했지만 회원국 국채 무제한 매입까지도 선언해 놓았지만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럽위기가 진정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그 와중에 성장률은 계속 추락하고 반대로 실업률은 뛰어오르고,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저항의 대열을 이루고 있다.

사실 근원적 해법은 나와 있었다. 경제 동맹에 상응하는 정치동맹을 만들어 미국과 유사한 진정한 유럽 합중국으로 발전시키든지, 아니면 채무위기국가들이 유로 통화 동맹을 빠져나와 독립적인 환율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하게 해주든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동맹으로 가는 길은 이상적이지만 아득히 먼 길이고, 통화동맹에서의 이탈은 위험성을 가능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공포’스럽다는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판적인 안목으로 세계화를 접근해온 선두주자이자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 국제정치경제학 교수인 대니 로드릭(Dani Rodrick)은 유로 존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세계화와 민주주의, 주권의 트릴레마’로 분석하고 세 가지 모두를 선택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유럽이 민주주의를 지속시킨다는 전제아래 각 국가의 주권을 버리고 정치통합을 이루든지, 아니면 세계화를 버리면서 통화동맹을 깨고 민주주의와 각 국가의 정치, 경제 주권을 적극 사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럽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에 대한 한층 진전된 설명 들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주권에 관한 진실 (The Truth About Sovereignty)

2012.10.08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대니 로드릭(Dani Rodrick)

유럽의 신재정협약에 대한 프랑스 의회의 최근 논쟁에서, 사회당 정부는 그 협약의 비준이 프랑스 주권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완강하게 거부했다. 장 마크 아이로(Jean Marc Ayrault) 총리는 그 협약이 “공공지출 차원에 국한된 제한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서, “예산 주권을 프랑스 의회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이로 총리가 자신의 사회당 멤버를 포함해서 신재정협약에 회의적인 동료들을 안심시켜고 하던 시점에, 유럽 집행위원인 호아킨 알무니아(Joaquin Almunia)는 브뤼셀의 사회민주당 동료들에게 유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뒤를 이어 그는 세계화와 주권은 서로 충돌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구도 국가 주권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특히 좌파 정치가들은 더욱 그런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주권을 상당 수준 제한할 수 있느냐 여부에 유로 존의 생존이 달려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유럽 지도자들은 유권자들을 오도시키고 있고 민주 정치의 유럽화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결국은 치러야 할 정치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유로 존이 완전한 경제적 통합을 열망하면, 국가 사이의 무역과 금융활동을 지연시키는 거래비용이 제거된다. 명백히 경제통합은 국가 사이의 무역과 자본 이동에 대한 직접 규제를 각국 정부가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제품 안전 표준이나 은행 규제와 같은 국내법이나 국내 규제들을 다른 유로 국가들의 것과 조화시킴으로써 간접적 무역 장벽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확실성 그 자체가 거래비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유형의 정책 변경 자체를 각국 정부들은 포기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유럽 단일시장 계획안에 내포되어 있었다. 유로 존은 한 발 더 나가 통화를 통합함으로써 국가별 통화와 관련된 거래비용과 환율 위험을 제거하고자 했다.

간단히 말해서, 유럽 통합 프로젝트는 유로 소속국가들의 국가 주권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만약 지금 유럽 통합의 미래가 의심스러워졌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국가 주권이 통합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 수준의 정치적 기구에 의해 뒷받침되는 진정한 경제동맹이었다면, 경제 동맹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그리스나 스페인 등의 금융 문제가 지금 상황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을 생각해보자. 플로리다 주는 다른 주들과의 거래에서 기록적인 경상수지적자를 내고 있다. 만약 플로리다 주 정부가 파산한다 하더라도 플로리다 은행은 정상적으로 계속 영업을 할 것이다. 은행들은 주정부 관할이 아니라 연방 정부의 관할 아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플로리다의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주정부의 재정이 투입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은행은 최종적으로 연방기구의 책임아래 있기 때문이다.

플로리다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면, 워싱턴(연방정부)으로부터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 플로리다 유권자들이 경제에 불만을 갖게 되더라도 플로리다 주 수도에 와서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연방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자기들이 뽑은 연방 의회 의원들을 압박할 것이다. 아무도 미국의 주정부들이 상당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주권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이해 역시 잘못되었다. 주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모두 비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정치학은 '민주적 위임(democratic delegation)'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서 국제기구나 독립적인 기관에 위임되는 등의 방식으로 어떤 형태의 주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중앙은행에게 통화정책을 위임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다. 물가안정을 이루기 위해 일상적인 통화정책 관리는 정치로부터 분리되어 있게 된다.

주권에 대한 선택적인 제한이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통합으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주권) 제한들이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국내정치에서는 (주권)위임이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진다. 그리고 사안이 대단히

기술적이거나 정당들의 견해 차이가 크지 않은 좁은 영역으로 국한된다.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세계화라면 이런 한계들을 존중할 것이다. 그것은 민주적 위임에 정확히 부합하는 한도에서, 그리고 자국의 민주적 숙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한된 절차적 표준(예를 들어 투명성, 책임성, 대표성, 과학적 명확성 등)을 따라서 수행될 때 허용될 것이다.

미국의 사례가 말해주는 것에 따르면,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그리고 다른 미국의 주정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장통합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살려내려면 대표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초국가적 정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세계화가 각 국가의 국내적 정책을 우선 시행하는 권한을 제한하면서도 그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민주적 공간을 확장해주지 않을 때, 민주주의와 세계화 사이의 갈등은 심화된다. 스페인과 그리스에서의 정치적 불안정이 말해주듯이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한계를 넘어서 잘못 접어들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정치적 트릴레마가 착목하려는 지점이다. 우리는 세계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 주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없다. 우리는 셋 중에 두 개를 선택해야 한다.

유럽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다면 정치적 동맹이나 경제통합 해체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들은 명시적으로 경제 주권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자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제주권을 사용하든지 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주권을 유로 차원으로 위임한다는 사실을 - 역자)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민족국가 수준을 넘어선 유로 차원의 민주적 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수반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장기적인 회복을 기대하면서 각 국가의 통화와 재정 정책을 펴도록 하기 위해 유로 통화 동맹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선택이 지연되면 될수록, 궁극적으로 지불해야 할 경제적 정치적 비용은 커질 것이다. 